

4대강 보처리 내년 6월로 확정

정부, 이달 중 평가조사단 향후 처리계획안 도출키로

정부가 내년 6월 4대강 보 처리계획을 최종확정하기로 하면서 계획안을 도출할 환경부 조사평가단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를 가진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전체 4대강 보 16개중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계획을 연말까지 발표하고 나머지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에 대해서 보 개방과 모니터링을 추가로 거쳐 처리계획안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과 함께 4대강 보 상시개방후 올해 연말까지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에 '20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 복원사업 추진'을 명시했다.

이후 6월1일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낙동강의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6개 보를 시작으로 10개 보를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수질·수생태계 등 11개 분야 30개 항목을 모니터링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국무조정실장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차관 등 회의체인 통합물관리상황반이 큰 방향을 제시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차관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손병석(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차관, 안병욱 환경부 차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면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포함된 환경부 상황실이 모니터링 및 조사·평가를 맡았다.

유역 환경정보로 현장 대응팀이 꾸려져 순찰, 민원 발생 확인, 개방 전 점검,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맡았다.

물관리 일원화 3법 입법이 완료되고 보 개방 1년 중간결과가 나오면 통합물관리상황반은 다음달 중으로 회의를 종료한다. 수량과 수질업무, 4대강 보 운영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만큼 환경부에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조사·평가를 진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단장, 인원 구성 등 조사단 구성 계획은 나

왔지만 정부내 논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어 외부에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민간 전문가와 국립환경과학원·홍수통제소 등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평가단은 크게 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각계 추천을 통해 학계, 시민사회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7월 중으로 이렇게 출범할 조사평가단은 향후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개방 영향 평가를 통해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보 처리방안 최종 결정은 내년 6월 출범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

원회가 맡는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등 2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정부부처 장관,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50명의 위원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촉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이 올 연말 금강과 영산강 5개 보를 시작으로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에 대한 처리계획안을 내년 상반기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면 이를 확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 처리방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수계별 의견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새만금개발청 현장이전 윤곽

12월 확정... 김관영 의원 "2012년 특별법 제정 이은 쾌거"

새만금개발청 군산 시대 개막이 12월로 확정됐다. 지난 30년간 지지부진 해 온 새만금이 환



립된 새만금개발청의 현장이전은 많은 논란 속에서 차일피일 지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끊임없는 대정부 설득 작업을 통해 지난 5월 정부의 현장이전 계획 입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이 새만금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하며 "어렵사리 자리 잡는 개발청과 개발공사가 새만금의 새 시대를 열어들 것이다"며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지난 2012년 김관영 의원 주도로 제정된 새만금특별법을 근거로 설

/김진성 기자

'국정원 특별비 1억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의원직 상실

재판부, 추가로 1억5000만원 벌금형도 선고

"장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사회 신뢰 훼손"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 국고를 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예산 편성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별비 1억원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장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의원이 먼저 특별비를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었다"며 "201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 의원이 직원들에게 특별비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불만만 증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별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현수(65)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받았으며, 당시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최 의원에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 의원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주한미군 '평택 시대' 열다... "동북아 안정자로서 세계평화 기여"

문 대통령 "한미동맹,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되길"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에 자리 잡고 있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새 동지를 틀었다. 1945년 미군이 용산에 첫 주둔한지 73년만의 일이다.

주한미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유엔군 및 주한미군 사령부 청사 개관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초대 연합사령관 존 베시의 아들 데이비드 베시 등을 비

롯해 정부 관계자, 한국군·미군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반도 동북아 정세는 냉전의 극명한 대립에서 평화 공존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북한 핵은 반드시 제거돼야 하며 남북은 새로운 교류협력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어 "이런 안보의 대전환기를 만들어낸 것은 우리 한미동맹이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인내하며 싸우지 않고 승리를 쟁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이제 평택기지에서 근무하는 유엔사 및 주한미군 장병들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임무를 맡아야만 할 것"이라며 "즉, 새 임무는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자로서 균형을 이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성공,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한 발걸음도 한미동맹이 강력한 역제와 대비태세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주한미군 사령부는 평택 시대 개막을 통해 한미동맹이 군사적 동맹과 포괄적 동

맹을 뛰어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은 축사에서 "캠프 험프리스는 10년의 시간과 10조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며 "대한민국은 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했다. 그 90%를 위해 미국은 100% 여려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관한 새 청사는 4층 규모 본관과 2층 규모 별관, 연병장, 강당 등을 갖추고 있다. 새 청사의 이름은 초대 연합사령관 존 윌리엄 베시 주니어 전 합참의장의 이름을 따 '존 베시 유엔군사령부 겸 주한미군사령부 본부'라고 명명했다. /뉴시스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